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년 2월 13일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미국과 동북아 주요 국가와의 관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7년 2월 13일(월) 오후 2시, 서머셋팰리스

사 회

이석(한국개발연구원)

토 론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김한권(국립외교원),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
정구연(통일연구원),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 요약글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는 쉽지 않은 출범과 함께 혼란으로 점철된 100일 계획 이행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제시한 트럼프 독트린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에 가까운 현실주의적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미국 우선주의에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선거기간 트럼프의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국역할론을 강조하거나, 이란과의 핵협상에 북핵문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도 보여 트럼프 역시 북핵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의 북핵해법 지속성도 예측가능하게 한다. 즉,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북한의 핵보유에 관한 선택지를 좁혀 비핵화라는 최종단계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의 고위직 임명과 국가안보회의 내부의 혼란, 그리고 행정명령 등에 대한 대내적 저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제 중 안보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강한 미군 재건과 미국이익을 우선하는 외교이다. 외교정책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다자협약의 원칙을 중시해온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실리를 중시하는 양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익에 부합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보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정책적 지속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는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긴장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책임론'을 기회로 활용하여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유럽 MD망 구축과 나토 접경지역 병력 강화 등을 비롯해 여전히 미러 간에는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미러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모색되고 있는 일러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관련인사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정책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원칙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향후 미국과 '주고받을 것'을 미리 검토하고 리스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과 같이 한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 긴밀한 공조와 지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실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강한 미국경제, 즉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규제 완화, 기업의 미국내 투자 및 생산 유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게 불리한 자유무역협정은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고,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압박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은 외부 때리기, 내부분제의 외부전가라는 점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몰려있는 동북아 경제권에 큰 파고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보복관세 부과 이상의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을 단순히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빠져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경제적 이슈보다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이슈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등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중 양국은 각각의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단기적인 긴장과 갈등의 고조가 예상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 개최 예정인 19차 당 대회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의 단기적 갈등이후 미중관계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선에서 미중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의 실천으로 인해 미중관계가 장기적인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단기적 갈등과 긴장의 시기동안 예상 못한 사안이 불거져 나오거나 갈등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양국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경차육 우려, 수출에서 내수중심 구조 전환, 지도부 내의 경제정책 이견), 외교·안보적(북핵문제와 미러관계 개선 등)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경제정책에 대해 양보할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핵심이익과 주변 국가로부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을 다시금 명확히 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新)도광양晦(韜光養晦)’의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안보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면한 입장을 나누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이 될지 고려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현재는 북핵이슈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IS, 러시아우크라이나, 각종 글로벌 경제이슈 등과 비교하여 향후에도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북핵문제가 위의 이슈들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초와 비슷하게 현상유지에 방점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러한 형국이 전개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작년 북한은 제재가 지속되는 국면 속에서도 노력동원, 비공식부문 활용 등을 통해 그럭저럭 버티어 왔기 때문에(muddling through) 올해는 내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바들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체제유지 공고화, 핵무기 고도화, 비공식부문의 제도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큰 이슈를 만들기 보다는 내부 결속 및 체제유지를 강화하는 시기로 설정하여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의 입장을 모두 확인한 후에는 큰 틀에서의 과감한 거래를 시도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많은 우려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행정부가 출범했다. 그리하여 다양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복잡한 상황이며, 예기되었던 불확실성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발언을 통해 중국과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방위금 분담문제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12일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는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이며, 북한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시작으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해 논한 후 안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경제문제 및 중국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로 토론을 이어 나갔으면 한다. 먼저 정구연 박사님께서 트럼프 신행정부에서의 변화에 대해 견해를 밝혀 달라.

정구연: 먼저 트럼프 신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기조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다. 많은 우려 속에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다. 벌써 외교·안보를 포함해 경제, 이민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은 국제적 위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차 그리고 상이한 해결방식에 기인한 것 같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하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전반적 기조가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 너무 다양해서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나온 방법론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면한



안보위협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셉 나이(Joseph Nye)가 말한 것처럼 ‘멀티 파트너 월드(Multi-Partner World)’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인식하에 나온 미국의 대전략이 ‘다자적 축소(multilateral retrenchment)’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자유주의적 질서하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미국적 질서를 통해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존의 다양한 위협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 테러리즘, 이민문제 등 세 가지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대외적인 위협의 외형보다는 본토에 국한된 위협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정하는 위협요소도 이 정도 수준의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트럼프는 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아닌 미국의 힘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즉, 공동의 이익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무역과 금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을 제고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그 군사력은 대외팽창주의가 아닌 미국 본토 수호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플랜(100 Day Action Plan)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며, 외교정책에서의 목표는 없다. 대외·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사이버 안보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오직 미국 본토로 국한하고 있어 국내의 경제적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만이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무역 및 금융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중상주의적 태도이다. 반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일 정상회담, 미중관계의 행보를 보면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중상주의적 경제적 접근법과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리버럴한 안보적 접근법이 어떻게 충돌하고 맞물릴 수 있을 것인가이다. 또한 기존 질서 하에 있었던 동북아시아, 남중국해, NATO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국가들은 미중 간의 해양 경쟁 속에서 경제문제는 중국에,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오더가 변할 경우 각 국가들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보적 측면에서의 방위비 분담, 재협상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로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최근 NSC 구성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명령이다. 예전 NSC 상임위원회에는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DNI) 등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금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 둘이 빠지는 대신, 그동안 국내 선거전략을 담당해 온 스티븐 배넌(Steve Bannon)이 들어갔다. 그런데 스티븐 배넌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우편향적이다. 예를 들어 배넌은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왔고, 더욱이 국내정치적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정치 사이클에 따라 실행정부의 안보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NSC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스티븐 배넌이 참가함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회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지금의 NSC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Mike Flynn)¹⁾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문제는 100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게 된 것이 아닌지 한국의 외교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문제를 100일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데, 북한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북한이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문제를 100일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NSC 내에서 항상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 강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급박하게 성명을 내는 상황을 봐서는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NSC 구성이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벌써 북한문제를 수면 위로 꺼낼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석: 전반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실행정부 간의 정책 및 인식의 차이에 대해 논해 주셨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복합·다면적이고 외부세계를 많이 고려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단순하게 국내적인 부문을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로 나아가는 외교정책으로 다른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아 박사님께서 논해 주시길 바란다.



김진아: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주변국과의 충돌 예상 부분, 또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구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트럼프가 내놓은 발언들 중에는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 상반된 것들이 많다. 특히

1) 편집자 주: 마이클 플린은 협의회가 개최된 이후인 2월 13일(미국 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국내문제, 통상·경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잡음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외교분야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외교와 군사 분야에 강경보수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반응들을 보면 안보분야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와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접근법에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방식이 다자주의와 원칙주의로 요약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주의와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보와 군사 중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상원에서 국방예산 증액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합동군의 현대화와 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고 하는 움직임들은 사실 동맹을 관리하고 동맹국과의 군사적 공조를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다.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역시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국방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병력을 본토로 옮길 경우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6대 국정과제 중 안보와 관련한 부분은 강한 미국 재건과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두 가지가 해당된다. 미국 우선외교는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동맹관리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동맹국에게 제공해 온 많은 공공재를 유상지급으로 전환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안보와 군방비용 부담이 증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발간 후의 변화이다. NSS 발간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도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만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태지역 대한 고립주의 행보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된다. 미국에게 있어 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인데, 아세안 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유럽 등 타 지역의 중요도를 낮추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근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보로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아태지역에 스텔스 구축함,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힘을 통한 외교력을 지속하며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것 같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반응과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글로벌 이슈에는 협력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지만, 남중국해 등 사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리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거듭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한편, 작년부터 꾸준히 늘려 온 해양훈련을 지속하는 등 원양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해양 이익보호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미국 역시 해양안보에 관해서는 물러서기 힘든 부분이 있어 해양에서의 미중 긴장 고조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접근법을 강조해왔다. 아세안 등과 다자적 공조를 통해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며, 실무적으로도 제도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자적 해결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방법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움직임을 중국이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RCEP 등을 강화해 역내 국가들에게 어필하거나, 유인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미일동맹 강화에는 일본의 군사적 부담 증가와 역할 증가가 맞물려 있어, 일본이 원하는 자위대 능력 강화와 역할 확대가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 기지 공격능력 강화 등 일본이 기존에 검토해 온 군사능력 강화정책에 활용할 계기로 삼을 것이다. 동맹국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위비 분담 증액 이슈와 일본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다루면서 국내적으로도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미일 공동 MD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 모두 윈윈(win-win)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기는 하였으나,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러관계가 회복될 경우 일러관계 개선과도 연결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 해양문제에 있어서는 미일 공조를 활용하여 대응할 것이다. 더욱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나 군사기지화 시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푸틴과 트럼프 간의 개인적 관계가 현재의 미러 관계 전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러 제재와 관련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공화당 인사들이 많고, 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당장 큰 변화를 줄 여지가 많지 않다. 다만 대러 제재와 관련하여서, 러시아는 미러 관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미러 화해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MD 구축이 미러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동유럽 MD망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MD 시스템 방어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MD시스템방어 컴퓨터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조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NATO 무용론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NATO 접경지역에 3개 사단을 증설했으며 최근 폴란드를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ISIS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며,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실전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전 훈련이나 무기사용을 통해 에러를 바로잡고, 군 현대화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석: 김진아 박사님의 의견 역시 군사분야에서는 근본적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은 강화될 것이나, 다만, 해양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쇼크는 군사적 분야보다는 경제적 분야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에 대해 정영식 박사가 의견을 말해 달라.

정영식: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사회 및 경제의 지층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중산층의 붕괴,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 변화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의 원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도 미국경제 약화가 내부 요인이 아닌 세계화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등장의 기저에 깔린 미국 사회 및 경제 지층의 변화이다. 이는 트럼프가 표방하는 정책 기조가 일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화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제와 관련하



여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방향은 6대 국정기조, 대통령 행정명령, 트위터를 포함한 각종 발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강한 미국경제, 부채목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규제 완화, 기업의 미국내 투자 및 생산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마디로 보호무역주의 추진이다. 미국에게 불리한 자유무역협정은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고,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압박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은 외부 때리기, 내부분제의 외부전가이다. 즉,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가 미국 내 경쟁력 약화보다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행위 등 외부 요인에 기인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실패를 외부로 돌리는 정책을 미국내 여론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내부 실패의 외부 전가는 경제 이슈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반이민 정책, 동맹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 등 안보, 외교, 이민정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이후에 있어 일관되게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신변변화, 정책간의 정합성 고려 등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간의 정합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즉, 정책의 장기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추후 정책을 추진할 때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는 미국만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는 강경파가 득세한 국가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양의 합(positive sum)'이 아닌 '영의 합(zero sum)'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영의 합 인식은 국가 간의 관계가 자국이 불리하면 상대국이 유리하고, 상대국이 유리하면 자국이 불리해지는 구도라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상대국의 이익) 때문에 자국의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게 되어, 자국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무역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복관세를 추진하고, 무역협정 측면에서 다자체제가 아닌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양자 체제, 그리고 자국 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초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할 것이라 발언했다.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미국에 불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구도에서 중국의 위상과 입지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다자체제에서는 빠지고 양자체제만을 추진할 때,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다자간 FTA를 주도하고, 동시에 EU와 자유무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대내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외 경제정책 측면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목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압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대미 교역을 둔화시키고, 이 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유발해 환율조작국 지정(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과는 상호 모순된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경기부양조치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럴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달러화 약세 정책과 반대로 달러 강세가 발생한다. 즉 트럼프 정부의 대내 경기부양정책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 지정, 보복관세 부과 등의 대응 이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현재의 중국은 과거 1980년대 일본의 위치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측면에서 그렇다. 즉 1980년대 미국이 일본에 취했던 경제적 압박을 중국에 유사하게 취할 수 있다. 한 예로 1985년 9월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이다. 골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화 약세, 엔화 등 여타 통화의 강세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자 플라자 합의를 밀어붙였다. 당시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50% 정도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했고 일본의 위상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에 일본에 대한 견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도 거셌다. 최근에는 급격히 부상하여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국력을 갖추게 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과거 일본에 취했던 것과 비슷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석: 역시 경제부문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펼칠 정책이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일관성은 뚜렷했지만 정합성은 없었다는 면을 지적해 주셨다. 이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미국이 어떻게 성장을 꺾고 정책을 펼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경제적·안보적으로 중요해진 시점이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어떻게 미중관계를 가져가고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김한권 교수께서 말씀해 달라.



김한권: 먼저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일단 미중 각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 같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기적 긴장과 갈등 고조 이후 어떤 대응이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방향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적절한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다시 양국 지도자들과 정부가 국내문제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미중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즉,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는데, 갈등과 도전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충돌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물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단기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미중 양국 모두 이러한 충돌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2기와 시진핑 주석의 1기부터 계속해서 해상·공중 조우에 관한 여러 합의를 진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지속적인

로 신뢰구축조치(CBMs)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따라 국제질서와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미중 양강구도가 아닌 미·중·러 삼각구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단기적인 긴장과 갈등은 낮아지겠지만, 어찌 보면 근본적인 틀에서 미중간의 장기적 긴장이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바라고 있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을 때 사실상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이다.

다음으로 위의 각 상황들에 대해 경제, 외교·안보 전략, 그리고 국제질서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은 적극적인 대미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문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다자간의 국제질서와 지역경제 부문에서 중국이 상대적 이익을 볼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양자 간의 미중협상에서는 중국이 밀리거나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다자관계에서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나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역대)는 중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아보인다. 왜냐하면 일본과 인도의 개방을 차이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조정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받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자관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자관계에서도 미국은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경제 부문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발전모델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안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국가발전모델을 변형하는 중인데, 이것이 안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그 틈새를 파고든다면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시진핑 지도부 1기에 들어와서 경제 구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을 것으로 예상하여 심각하게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지도부 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인 경제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시진핑의 경제 참모인 류허(劉鶴)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진지한 경제개혁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치중인 상황이다. 이상 세 가지의 요소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제적 충돌보다는 적절한 선까지 양보하여 갈등을 풀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한다.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대미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 대만·남중국해·북핵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들을 관점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리처드 하스 美외교협회장 등 공화당 계열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2013년을 전후하여 국제질서와 미국의 리더십 대한 논의와 대응방향을 공개적으로 구상해 왔다. 그들의 논의는 현재의 국제상황에 구체적인 선을 그어 과감하게 얻을 것은 얻고, 내어줄 것은 내어 주고자 하는 방향이다. 중국에게 타이완은 핵심이익이며, 남중국해는 핵심이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북핵문제는 안보적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익'들에 대한 중국의 저항선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키호테 식으로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정책방향은 부장관급의 인사 임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3년 전후로 나타났던 공화당 계열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대선기간 중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의문점과 對중국정책에 관한 핵심 키워드를 언급해 왔으며, 또한 이에 따라 인사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방향이 대선기간의 레토릭이 아니라 세밀하게 준비되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중국 입장에서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간의 시각처럼 자신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즉흥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비교적 용이하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양보와 이익을 교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상의 시기는 시 주석에게 정치적으로 여유의 공간이 생기는 19차 당 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시진핑 주석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19차 당 대회 이전 미국이 강경 일변도의 대중정책을 펼친다면 양국은 정치적 타이밍이 맞지 않아 타협점을 찾는 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미러관계가 개선된다면, 이 역시 중국에게는 적지 않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방향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19차 당 대회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이후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보다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강경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선택사항은 매우 좁아질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19차 당 대회 이후 군사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다면, 중국 역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중국의 대응책은 우선 지경학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일정 부분 양보가 있더라도 중국이 핵심 이익을 단호히 지키며 주변 국가로부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은 양보 없이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신(新)도광양회(翰光養晦)’라고 부르며, 앞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양보할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금 명확히 조정하고 대응하는 ‘신도광양회’의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석: 중국이 미국과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경제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게다가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문제 또한 거론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종규 박사님께서 트럼프 시대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말씀해 달라.

이종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나누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 외교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내부적 문제의 외부전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이 중요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별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북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는 지금까지의 기조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입장을 보면, 경제적으로 2016년 무역이 증가하여 2014~15년 연속으로 무역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해외노동력 송출 등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는 올해 북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을 내수를 통해 상쇄하고자 하였다. 작년 북한의 내수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70일, 200일 전투와 같은 노력동원이다. 작년 전체 일수의 70%에 걸쳐 강제노동을 진행하여 외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시장경제 자금을 공식부분으로 흡수시키는 제도적·공식적 채널을 확보하려 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국산화 강조, 자강력제일주의가 이를 위한 추진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쿼터제 도입을 추진, 관세를 높이는 등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한국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시기별로 나눌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은 큰 이슈를 만들기보다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모두 확인한 후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 평화협정과 같은 큰 틀에서의 과감한 거래를 시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 북한문제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고, 북한은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국면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양측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다.

지금까지 여러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미국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국가인만큼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많겠으나, 오늘 토론의 핵심은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달라질 점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정구연 박사님께서 이에 대해 논해 주시길 바란다.

정구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발언한 내용, 그의 어드바이저들이 언급한 내용,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한 인물들의 발언 내용에는 모두 많은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조에 흐르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이 아시아에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가적인 기질, 소위 말하는 '전략적

거래주의(tactical transactionalism)'의 일환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단기적으로 집중은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입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했으며, 정책입안자들 또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큰 발언이 없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요시한 사안은 북핵문제, 한미 방위금 분담 재협상 그리고 한미 FTA가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김정은을 협상 상대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과거 논란이 된 김정은과의 대화를 햄버거를 먹으며 진행하겠다고 한 발언은 회의를 캐주얼하게 하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추측내용과는 다르다고 본다. 발언의 앞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에게 스테이크 저녁이 아닌 햄버거만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김정은을 공식적인 상대국의 지도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에 레버리지를 많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했을 때 수사적(rhetoric)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핵문제가 동아시아 전체 문제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가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혹은 한미일 3각관계 등에 있어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석: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덜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 단지 방법론상으로만 미국이 중시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정영식 박사께서 말씀해 달라.

정영식: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선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을 환율조작국 중 하나로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인이 된 후 가졌던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이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는 한국 관련된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빠져 있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첫 번째로 미국에게 한국은 경제보다는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항상 친미국 성향을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이슈를 수면 아래로 두었다고 생각된다. 현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 이슈를 들춰낸다면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은 경제문제를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전체적인 트럼프의 대외 경제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정확한 스탠스를 밝히고 있지 않다. 물론 주 타깃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포함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때리는 식의 전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8년은 G20, FTA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와 공조가 키워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자국 내 실패를 외부에 전가는 방향으로, 즉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동시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석: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경제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즉, 아직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내적인 사정도 있고 미국 또한 당장 경제문제보다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 한미동맹의 경우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 같다. 이에 대해 김진아 박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김진아: 주한미군 주둔비의 세부 항목을 자세히 보면 미군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불하지만 시설지원·유지비 등은 한국이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잘 되어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방위비 분담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 한국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ISR(정보·감시·정찰) 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새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한국의 역량 강화를 미국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전작권 전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이 키워야 할 역량 등을 갖출 수 있게 압박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 왔던 부대 이전문제 등을 포함하여 그간 한미동맹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따라서 동맹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다고도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인 포커스를 두고 한반도 방위와 안정을 지향하며 관리를 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에 대해 더 많은 요구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MD 체제로의 편입 문제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문제와 한국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KAMD 개발을 고려하여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이 MD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을 포함해 한국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북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보도하는 북한 관련 뉴스들이 예전보다 북한 관련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선제타격 등의 강경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던 내용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야만 하는 현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목적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달성케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선제타격이라는 강경정책을 모색하는 것과 모라토리엄을 상정한 협상을 개시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해 모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선제공격은 기술적 제약성이나 인명 피해 등의 리스크를 생각할 때 쉽게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후자인 모라토리엄 협상안이 수용하기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협상(big bargain)을 북한과 시도한다면 한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핵국가 지위를 인정받고자하는 북한과 모라토리엄 협상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나서면 그간 고수해온 비핵화 협상이 틀어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했으며,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힘들게 이끌어왔다. ICBM 개발을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모라토리엄을 상정한 양자 대화를 시작하면서 타협안을 구상한다면 기존에 한국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미동맹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만약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변화할 경우, 지금까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예상해 왔던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석: 한미 안보동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물론 동맹과 대북정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며,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과의 동맹문제를 봐야 하며, 북한문제가 앞으로 더 중요해 질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해 봤는데, 이번에는 중국은 한미동맹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서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김한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김한권: 먼저 중국은 한미동맹을 2008년 이전까지 분명히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상승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로 지칭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전략적으로 미중사이에 중립을 지켜주길 바라는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도 최근에는 주변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미중사이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지만 중국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한국이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6 대 4 또는 7 대 3 정도로 유연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할 국가로 인식한다면 중국에게 전략적 불안요소는 러시아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러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및 한반도 문제는 그간 중국의 對美 / 對韓 지렛대 역할을 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 및 미중협상에서 유효한 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한반도 이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올해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몇 시간 만에 보고 받고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 것과 2월 12일 북한의 기습적인 IRBM 미사일 실험에 대해 아베 총리와의 만남 중 즉시 공동으로 북한을 규탄했다는 점에서 엇볼 수 있다.

한편, 과연 미국이 정책적으로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본토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미국의 대응은 중국을 견제하여 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빌미로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 더 나아가 아시아판 NATO라 볼 수 있는 한미일 지역 동맹화 추구 및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 또한 위의 세 가지 시각에 기인하여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국면이 자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북미 간 평화협정에 대한 중재역할을 통해 제재보다는 대화국면으로 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2월부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제재국면에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UNSC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더라도 ‘빈틈’을 통해 얼마든지 제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분간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안보적인 이슈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석: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반길 것 같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경제보다는 안보 이슈가 더 중요시 다루어질 것 같다.

이종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얼마나 자극적인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핵문제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기본입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장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변화의 시기에 대비하여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을 내부적인 부분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30년의 대북관계는 착수기(노태우·김영삼 정부), 확대기(김대중·노무현 정부), 조정기(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는 내부적인 컨센서스(합의)를 이루어 내어 성숙기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이다. 현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확대기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 내부 컨센서스를 견고히 하여 외부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석: 미국이 현재와 같이 우리에게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면을 염두해 두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한권: 사드(THAAD) 이슈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유는 사드 이슈가 한반도에서 당면한 미중 간의 군사안보적 초점이며, 양국의 군사·안보 전략적 대응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민감한 이슈로 인해 한국에게 예상 못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드는 정부가 추진해 온대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린다면 단기적으로는 한중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입지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향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에게 더욱 지속적이고 강화된 압력을 가할 것이며, 설사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견지해도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면 한국의 여론은 흔들고 분열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출구전략은 중국이 실제로 우려하는 부분인 사드의 역할과 기술력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첫째, 한국은 사드의 역할과 기술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군사·안보적으로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이 기존의 정책인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미중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무엇인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앞서 김한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사실 이를 장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다 보면 통일정책이 약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일정책을 펼치다 보면 북한 억제정책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균형을 잡아서 향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통일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이석: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하는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펼쳐 온 현상유지 정책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다면 경제쪽에서는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정영식: 현재 한국과 관련하여 안보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향후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국제협약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공조해 자유무역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중국 등과 힘을 모아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G20 정상회담이 올해 7월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개최국인 독일로 하여금 공동 합의문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포함시키도록 압박하고, 또 이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이 금리 상승을 통해 신흥국과 한국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를 대비한 통화정책,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올해 10월에 있을 한중 통화스와프 재협상까지 실패한다면, 미국 금리 상승은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석: 현 상황에서는 결국 사드 배치 등 모든 문제가 안보문제로 귀결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안보문제에 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진아: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자적 운영에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기 힘들다는 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sorting)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우선순위(priority)와 미국의 우선순위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받아들여, 상대방이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것은 주눅타라는 생각으로 거래 리스트를 사건에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한일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협력을 구체화하여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체결된 제도이며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 한미일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협력함으로써 양보하고, 대신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대북정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이 무조건 한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확인 받고 대응체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규: 향후 북한 이슈와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북한경제가 지금 어려워졌다고 다시 열기를 띠는 시나리오에 따른 통일연구, 예산,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사실을 확인할(fact-finding) 수 있는 연구 기회를 만들어 대북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석: 오늘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등장 이후의 동북아 정세, 한반도 관계, 대북문제에 대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협의회를 마치고 하겠다.